

어명소 제2차관, “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하게 대처” 강조 - 6일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… 비상수송대책 집중 점검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,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.

* (時/所/參) '22. 6. 6. 16:00 / 정부세종청사 / 국토부, 해수부, 경찰청 등 9개 기관

○ 화물연대는 기자회견(5.23), 총파업 결의대회(5.28)를 통해 6월 7일 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,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.

□ 어 차관은 “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”이라면서,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“주의”에서 “경계”로 격상하였다.

○ “최근 코로나-19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,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”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어 차관은 “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,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 원칙”임을 강조하면서,

○ “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”을 거듭 강조하였다.

2022. 6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